한국지방행정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12-6(서초동) TEL. 02-3488-7399 FAX. 02-3488-7309

지방자치 Focus
제65호
2013. 11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지원정책 강화방안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목 차]

Ⅰ.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강화의 필요성
Ⅱ. 북한이탈주민 발생배경
Ⅲ. 북한이탈주민 현황과 정착과정상의 문제점
Ⅳ.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및 문제점
Ⅴ.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강화방안

지방자치 FOCUS 제65호(2013. 11)

내용문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조석주
02-3488-7316 / csj@krila.re.kr

배포문의 발간 담당자(02-3488-7399)

본 내용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www.krila.re.kr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지원정책 강화방안

조석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지원정책 강화방안

Ⅰ.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강화의 필요성

○ 최근 북한을 탈출한 주민들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한국사회에 정착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과 비례해서 이들의 남한사회 부적응 사례가 증가하는 등 정착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물론 이들에 대한 국민의 편견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 북한이탈주민은 탈북주민, 북한이주민, 새터민 등의 용어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북한에 주소 · 직계가족 · 배우자 ·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함

○ 북한이탈주민은 국적을 취득한 우리의 '국민' 인 동시에 소수집단인 유입 '이주민' 의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

○ 북한이탈주민은 분명히 우리 나라 국적를 소유한 대한민국 국민이긴 하지만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된 이후 남과 북이 분리된 이후 약 68년이 지난 현재, 남한과 북한은 정치적 · 경제적 · 문화적 · 이념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음

○ 이런 이유로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에 왔을 때 기존의 사회주의 체제에 익숙해진 이념 그리고 과거와의 문화차이에서 오는 이질감으로 인해 한국사회에 제대로 적응을 못하고 있음

○ 국가에서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즉, 통일부를 중심으로 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들의 정착과 관련된 지역주민과의 화합과 취업, 교육훈련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음

○ 한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정책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긴밀한 협조와 연계하에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중앙정부의 주도하에 추진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그 이유는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정착과정에서 통일부 소속의 교육훈련기관인 하나원의 퇴소 후 이들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차원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정책 및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은 물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미흡하기 때문임

○ 이와 같이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 및 정책에 문제가 있지만 지속해서 이들에 대한 깊은 배려와 함께 정책의 개선 및 강화가 필요함

○ 이와 같은 인식하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정착과정에서 나타나는 현황과 문제점, 이들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한 후, 이를 중심으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음

Ⅱ. 북한이탈주민 발생 배경[1)]

1. 탈냉전적 국제환경

○ 탈냉전적 국제환경은 정치적 다국화와 집단안보체제 및 국제기구의 강화를 촉진하였음

– 미국이 군사적 패권을 향유하고 있지만 걸프전에서 영국 · 프랑스 · 사우디아라비아 등 기타 국가들과 연합국을 형성하여 UN안보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집단안보협력을 추구하였음

– 정치적으로 다국화하고 있는 세계에서 주권국가보다도 UN과 유럽 및 연합세력이 집단적으로 안보를 보장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 탈냉전적 상황은 경제면에 있어서도 주권국가들이 하나의 국경없는 경제로 상호의존하고 있으며, 경제적 상호의존은 대륙 간의 교통첨단 기술과 정보혁명이 발달되면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음

○ 따라서 세계는 국경 없는 경제, 약화되고 있는 다자주의적 경향이 강화되고 중상주의와 지역주의적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생산과 시장이 범세계화되고 있음

○ 그 이유는 자본과 생산이 국경을 초월하여 비교 우위와 환율의 이전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며, 생산은 그 비용과 기술 및 경영에 있어서 수평적으로 국가 간에 이루어지고 있어 각 지역에 맞는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기에 이르렀음

1) 본 내용은 김경호(2005), '새터민의 사회정착 지원책에 관한 고찰' 의 내용 중 일부를 인용하였음, pp.45-50.

○ 이러한 변화는 결국 생산주기의 단축과 직접투자가 용이해지면서 다국적 기업이 계획적으로 장려되고 그 결과 국적없는 다국적 기업들을 형성하게 되었음

○ 그러나 북한은 자국중심의 자력갱생을 고집하고 있어 대내적으로 경제적 고립을 자초하고 있음

○ 다자주의는 1945년 미국 주도의 브레튼우즈(Bretton Woods)체제가 수립되었을 때 경제에 관한 국제레짐의 중요한 원칙으로 채택되었으며,[2] 당시 미국은 영국의 도움을 받아 세계은행을 수립했고 그 후에 GATT도 다변주의 원칙에 근거하여 운영되었음

○ 다자주의의 약화는 중상주의의 생성을 자극하게 되었으며, 미국과 같이 부강한 나라가 자유주의를 지양하게 되자 여타 국가들은 국제협조보다도 자국의 이익을 앞세우는 중상주의를 추구하게 되었음

○ 미국은 이러한 중상주의에 대처하기 위해 일본과 신흥공업국들에게 쌍무적인 협상을 통해 자발적 수출자제(VER) 등의 비관세 장벽을 적용하였음

○ 이러한 다자주의와 중상주의 간의 타협으로서 후자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주변의 국가들의 협조속에 발전하게 되었음

○ 그러나 북한은 구사회주의권 국가에 대한 의존적 자세와 함께 대미중심의 대결을 통한 자국의 경제문제 및 체제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그 결과로 대량의 북한 이탈주민을 양상하였음

2) Young, Oran R "International Regimes : Problems of Concept Formation, "World Politics, Vol.32, April,1980, : Haggars, Stephan., and Beth A. Simmons, "Theores of International Regim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41,Summer,1987.

2. 북한의 경제난

○ 북한의 경제는 자국기술과 원자재에 의존하여 투자의 중점을 중공업에 두고 원자재의 자급률을 향상시켜 이를 통한 소비재의 자급률을 높이려는 '자립적 민족경제' 에 그 바탕을 두고 있음

○ 그 결과로 수출산업은 부진하고 국산화 편중으로 생산비와 물가상승을 초래하여 1970년대부터 높은 대외채무를 지고 있음

○ 더욱이 1980년대의 소비재의 심각한 부족 현상과 더불어 소련의 고르바초프의 등장과 함께 대외 결재방식에 기인하여 극도의 외화부족 현상에 직면하였고, 나아가 소련의 해체와 중소의 국익 중시적 대외관계는 북한을 더욱 곤경에 빠지게 하였음

○ 특히 그동안 북한은 대외적으로 제3세계국가들에 대한 무리한 원조와 대내적으로 전력과 에너지 부족현상을 맞이하여 심각한 경제난에 빠지게 되었고[3] 그러한 현상은 1990년대 내내 '고난의 행군' 을 통해 극복하고자 하였음

○ 2001년 신년 초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중국의 상하이 푸동을 방문하면서 새로운 경제난 극복을 위한 시도를 모색하였으며, '2002년 7 · 1경제관리조치' 를 취하였음

○ 북한이 그동안 지속해 왔던 사회주의 중앙계획경제 운영방식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원리 방식을 점진적으로 적용하고자 한 것임

○ 이러한 시도는 경제관리 개선, 신의주의 개방, 그리고 적극적인 대외관계 개선의지는 국내적으로 당면한 경제난을 극복하고 국제경제체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이러한 점에서 과거의 계획효율화 조치와 나진 · 선봉의 제한적 개방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음

○ 이러한 북한의 변화모색은 개혁과 개방을 병행 추진하며 적극적인 대외환경 조성과 연계되어 시도되었으며, 이러한 북한의 변화의 시작은 2002년 7월부터 시작된 경제관리 개선 조치부터 시작되었음

3) 정주신, 국내의 탈북자 실태와 정부의 과제-경제적 측면을 중심으로-, 한국통일전략학회, 「통일전략」 제3권2호(2003). p.105.

○ 북한의 이러한 노력은 결국 북한 상황이 여전히 생필품과 경제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즉, 북한은 1990년대 이후의 지속적인 마이너스 경제성장과 1995년 이후의 자연재해로 인해 식량난이 극도로 악화되었고 그 결과 일부지역에서는 아사자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상황의 연속이었음[4)]

○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은 결국 단기적 처방에 의한 해결의 기미는 여전히 보이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그 결과로 인해 2002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3. 최고 지도자의 리더십 손상

○ 최고 지도자의 리더십은 체제의 안정성과 직결됨
- 북한에서 지도자의 지시는 곧 법과 동일시되었으며 북한의 경제위기와 더불어 지도자의 리더십은 손상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음
- 지도자의 지시가 합당할 경우도 있고 부적당한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부적당한 경우들이 나타나고 지시가 성과로 연결되지 못함으로 인해 지도력에 대한 신뢰가 손상되는 경우도 나타났음

○ 그럼에도 지도자의 지시에 북한인민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할 수 밖에 없도록 조직화되어 있음
- 북한주민들은 지도자의 지시에 대체로 수동적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아울러 자신들의 사회조직 안에서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실리적인 선택을 하고 통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적극적으로 또 다른 합리적 대응을 함

○ 특히 지도자의 현지 지도가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었으며, 북한 언론에서 지도자의 현지 지도의 성과를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것은 체제안정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에 북한주민들은 방송의 선전에 오히려 소외감과 좌절감을 느낀다는 점에서 실제 선전의 효과는 미미하다고 할 수 있음

---

4) 김성철 외, 「북한이해의 길잡이: 전환기의 북한사회」 (서울: 박영사, 1999), p.184.

○ 따라서 북한의 경제난에 대한 인식의 주체로 지도자를 주목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절대적 리더십도 손상을 받게 되었고 이는 결국 사회통제의 이완으로 나타나 대량 북한이탈주민이 양산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Ⅲ. 북한이탈주민 현황과 정착과정상의 문제점

1. 북한이탈주민 현황

1) 북한이탈주민의 입국현황

○ 북한이탈주민의 입국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음

– 즉, 2000년 이전까지는 1,400여명에 불과했으나, 2001년부터 연간 1,000명이상, 2006년부터는 1,500명 이상이 입국하여 2013년 9월에는 약 2만 5천명 이상 거주 예상

– 한편 북한과 중국의 국경지역 경비 강화 등과 맞물려 2010년에는 2,400여명으로 감소되는 추세를 보였으나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전체 북한이탈주민 중 69%가 여성임

〈표 1〉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13.9 현재)

구분	~'98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9	합계
남	831	565	511	472	624	423	512	571	608	671	589	676	405	250	7,829
여	116	479	632	810	1,272	959	1,510	1,977	2,197	2,258	1,813	1,568	1,097	791	17,820
합계	947	1,044	1,143	1,282	1,896	1,382	2,022	2,548	2,805	2,929	2,402	1,041	1,502	1,041	25,649
여성비율	12%	46%	55%	63%	67%	69%	75%	78%	78%	77%	75%	76%	72%	76%	69%

자료 : http://www.unikorea.kr

2) 북한이탈주민의 지역별 거주현황

○ 북한이탈주민은 아래의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들의 약 56%가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음

– 이는 북한이탈주민들의 강한 수도권 선호현상과 국민 · 영구임대주택을 할당할 수 있는 지역에 우선 배정 등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로 인해 북한이탈주민 밀집거주지역이 생겨나고 있음

– 특히 북한에서는 평양지역 거주가 특권층만 누리는 혜택으로 인식되어 한국입국 이후에도 서울 등 수도권에 거주하고 싶은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

〈표 2〉 북한이탈주민 지역별 거주 현황('11.8 입국자 기준)[5)]

지 역	서울	경기	인천	부산	경남	충남	대구	경북	충북
인원(명)	5,749(29%)	5,344(27%)	1,853(9%)	812	732	739	634	726	612
지 역	광주	강원	대전	전남	전북	울산	제주	계	
인원(명)	533	493	441	438	356	257	129	19,878명	

자료 : 안전행정부 내부자료(2012)

3) 북한이탈주민의 연령별 현황

○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연령별 거주현황을 보면, 30–39세가 6,575명(약 32%)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20–29세가 5,817명(27%) 이며, 그 외에 0–9세 및 60세 이상은 5%내외로 매우 적음

〈표 3〉 연령별 유형('11.4 입국자 기준)

구 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계
누계(명)	829	2,470	5,817	6,729	3,338	1,032	976	21,191
비율(%)	4	12	27	32	15	5	5	100

자료 : 안전행정부 내부자료(2012)

4) 북한이탈주민 재북 당시 직업별 현황

○ 북한이탈주민의 북한에서의 직업을 살펴보면 무직이 10,248명으로 50%로 가장 많고, 두번째가 일반 노동자 7,901명(38%), 관리직, 전문직, 예술체육 등 분야는 2–3%로 매우 적은 특징을 보이고 있음

○ 따라서 이들은 대부분 일반 노동자나 주부로 북한의 하위층을 형성했던 사람들로 볼 수 있음

5) 사망, 말소, 주소 미등록, 보호시설수용자 제외

〈표 4〉 재북 당시 직업별 유형(’ 11.4 입국자 기준)

구 분	무직	노동자	관리직	전문직	예술 · 체육	봉사	군인 · 공작원	계
누계(명)	10,627	8,127	390	448	188	817	594	21,191
비율(%)	50	38	2	2	1	4	3	100

자료 : 안전행정부 내부자료(2012)

2. 문제점

1)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정착과정상의 문제점[6)]

○ 첫째, 가장 큰 심리적 어려움은 북한이나 중국에 두고 온 가족 걱정과 그리움임

– 대체로 북한이탈주민은 헤어진 가족들에 대한 죄의식과 그리움이 크며, 가족을 향한 미안함과 죄책감을 송금 등의 경제적 보상으로 해소하려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

○ 둘째, 건강상의 어려움

–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치과, 산부인과, 내과적 질환을 앓고 있음

– 또한 이들은 건강검진에서 이상소견이 없는 경우에도 두통, 소화불량 등 신체적 장애를 호소함

– 이러한 문제는 결국, 북한에서 만성적인 영양실조와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 점, 고향과 가족을 떠나오면서 심리적 고통과 우울함, 탈북과정에서 생활의 피폐함 등이 직 · 간접적으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음

○ 셋째, 취업능력 부족과 직업유지의 어려움

– 북한에서 익혔던 기술은 남한사회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직업능력에 이르지 못하나, 이들의 취업에 대한 기대수준은 상당히 높음

– 기대수준이 높으면 취업을 하지 못한 채 무직으로 지내게 되며, 북한에서의 직업을 남한에서도 갖기 위해 다시 전공 공부를 시작하거나 기술을 습득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음

6) 박영자, ‘한반도 통일 · 통합을 관통하는 사회통합가치와 정책방향’ , 이화여대 통일연구원 가을학술대회논문, p.57-60, 2011.10.20. 참조

– 직장을 가진 북한이탈주민들도 북한사회에서 습득된 행동이나 사고방식으로 인하여 직장 동료들과의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노동의 강도가 세다는 이유 등으로 오래 견디지 못함으로 인해 직장 근무기간이 단기간인 점 등 많은 어려움을 보이고 있음
– 취업이 어려운 이유로는 우리 사회의 편견, 취업의지 부족, 열악한 사회보장시스템 등이 있음

○ 넷째, 상대적 경제적 및 일상생활 적응의 어려움
– 남한에서의 의식주 생활이 북한에서보다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만, 자녀들의 교육비나 생활비 부담 등으로 오히려 상대적 빈곤을 느끼고 있음
– 무직 또는 비정규직 · 파트타임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은 경제적, 심리적으로 궁핍감을 느낌
– 한편 낯선 남한사회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북한이탈주민들은 일상생활의 모든 것을 처음부터 배워 나가야 함
– 지역의 지리나 교통편 이용, 공공기관이나 봉사기관 이용, 자녀교육 및 진로지도, 생활용품 구입, 합리적인 소비생활, 결혼과 이성교제를 위한 정보 등 일상생활의 세세한 부분에까지 어려움을 겪게 됨

〈표 5〉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정착과정의 어려운 점

구 분	주요내용
경제적 어려움	○ 현재 하고 일에 대한 만족도는 높으나 계약직으로 인한 저임금으로 생활이 어려움 ○ 브로커 비용을 지불한 후 한국의 경제사회구조를 모르기 때문에 경제적 적응이 어려움 ○ 북에 있는 가족까지 일부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남한사회에서 경제적 문제 가중
취업	○ 기간제 공무원의 경우 계약직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음 ○ 계약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심리적인 불안감을 가지고 있음 ○ 취업하는 경우 생계비(정부보조)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취업과 생계비 포기사이에서 고민
네트워크	○ 가족관계가 없기 때문에 정착이 어려움 ○ 남한에 오기 전 큰 기대를 가지고 오지만 처우에 대한 실망이 큼

건강	○ 탈북과정에서 정신적 · 육체적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후유증이 심함
신변위험	○ 본인이 북한이탈주민이라는 것을 숨김
직장 내 조직문화 적응	○ 대인관계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적응노력 ○ 일부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특별한 사람으로 인식 요구
업무 전문성	○ 처음 시작하는 일이라 업무처리상 어려움이 있음 ○ 업무에 관해 묻고 싶어도 대상이 없음 ○ 업무의 이해도가 낮고 과거 북한에서 관련업무에 종사해 본 경험이 없음 ○ 본인 업무외 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않음 ○ 어느정도 숙달된 상태에서 업무 투입이 가능함
문화적 차이	○ 언어의 차이로 인한 어려움

2) 인식상의 문제점

○ 첫째,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 간 인식의 차이로 인한 갈등 발생

–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에서 본인들에 대해 제대로 대접을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함

– 즉, 한국에 오면 그들이 꿈꾸던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서 오지만 남한사회에 와서 경제적, 차등적 대우에 불만을 갖거나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음

– 한편 남한주민은 상대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 즉,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5년 동안 임대주택이지만 집을 주고 있고, 직업훈련비 지급, 고용지원금 지원, 자격증을 딸 기회를 주고 있는 등 많은 혜택을 주고 있어 이로 인한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인해 불만을 갖게 됨

○ 둘째, 북한이탈주민들 스스로의 실력과 노력에 의한 성취 의지 부족

– 북한이탈주민들은 그들이 목숨을 건 국경탈출, 중국, 몽고사막, 동남아시아 등을 거쳐 한국에 들어 온 만큼 한국과 국민은 당연히 그들에게 집, 직장, 정착지원금을 주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

– 한편 이러한 의식이 관습화되어 그들 스스로의 자율의지에 의한 삶의 노력을 게을리 하고 있으며, 한국정부의 이들에 대한 온정주의 지원정책이 북한이탈주민의 자율의지를 약화시키고 있음

○ 따라서 냉엄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경쟁을 통한 성취를 통해 자기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기본적인 인식개선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국가정책도 자율의지와 자생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함

Ⅳ.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및 문제점

1. 중앙정부의 지원정책

1) 일반현황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중앙부처의 지원정책을 보면 〈표 6〉과 같이 통일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외에 고용노동부,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에서 지원업무를 수행함

〈표 6〉 북한이탈주민 관련기관 업무분담 및 정착지원내용 [7]

구 분	주요내용
통일부	○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동향분석 ○ 지역협의회 지원 ○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 대책수립 ○ 북한이탈주민 후원과 관련된 민간단체와의 지원협조 ○ 거주지 · 신변보호담당관 지원 · 관리 ○ 하나원 운영지원 및 관리 ○ 거주지 정착지원 온라인 시스템 관리
안전행정부	○ 북한이탈주민 채용지침 작성 ○ 지방자치단체 실적관리 및 채용 독려 ○ 채용 이후 성과평가와 문제점, 개선방안 제시
고용노동부	○ 취업상담 및 취업 알선 ○ 전국 고용안정센터에 취업보호담당관을 지정, 취업상담 · 알선 역할담당

7) 이 표는 북한이탈주민 관련기관 업무분담 및 정착지원내용으로, 1997년에 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들에 대한 정착금 지원, 생계급여, 주택제공, 교육보호, 기초생활보장 등 지역사회정착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보건복지부	○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지원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역량강화로 국민기초생계수급자 지정 및 지원, 자활 후 기관 연계, 공공근로 참여 업무와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정 등 요보호자 지원 업무
경찰청	○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담당기능 및 신상파악 업무, 애로사항, 동향 파악 ○ 보안협력위원회 운영을 통해 간담회, 한가족 결연사업 후원, 법률 · 의료 · 취업교육 등 상담과 지원 ○ 거주지 관할경찰서에 신변보호담당관을 지정, 외부의 신변보호 를 위해 관련 상담역할 담당
대한적십자사	○ 정착도우미 지원 ○ 1년간 1세대 당 2명의 도우미가 초기 정착생활 지원
교육과학 기술부	○ 대학진학 희망자의 경우 특례입학
LH공사	○ 임대주택 확보

2)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정책 및 체계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이란 북한을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북한주민에 대해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 있어서 신속히 적응 · 정착하는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을 하는 사업을 의미함[8)]

○ 통일부의 정착지원 사업은 통일정책실의 정착지원과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결정', '북한이탈주민의 주거알선 및 생활 · 의료 보호', '북한이탈주민의 학력인정 및 취학 · 편입학 등 교육지침',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적응교육 및 지방자치단체 사후관리 종합지원' 등 18개 업무를 수행하고있음

○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은 하나원,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북한이탈주민적응재단을 통해 추진되고 있으며 그 내용과 지원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1) 하나원

○ 정착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정착지원시설' 로서 직제상 명칭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
– '99.7월 하나원(안성), '12.12월 제2하나원('화천분소')개원

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 1조

– 본원은 여성 특화교육, 분소는 남성 특화교육 및 심화교육으로 운영
– 1997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총 22,800여명의 사회적응교육 수료 후 사회에 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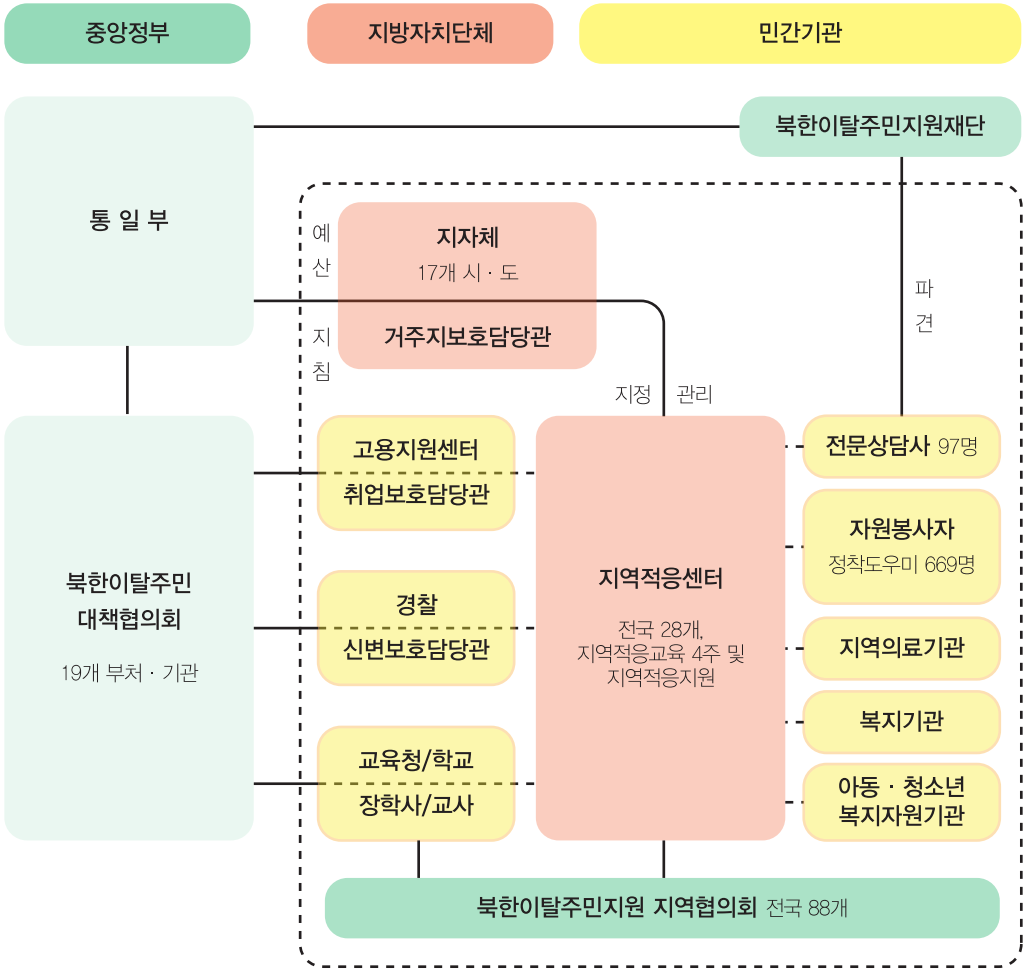
○ 보호 결정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12주간 사회적응교육 실시
– 정규 프로그램(총 392시간)외에, 일과 후 및 주말 자율 참여형 보충 프로그램 운영(총 259시간)
– 연령 및 성별을 고려, 성인반(남성,여성),청소년반, 초등반, 유치반, 영아반, 경로반등 7개반으로 운영
– 취업지원을 위해 여성 1인 12개 직종 탐색(봉제, 기초조립, 한식조리, 여행가이드, 사무행정 등), 남성 3개(중장비, 자동차정비, 용접) 직종 중 1인 1직종 기초 직업교육
– 이와 함께 가족관계 등록, 주민등록번호 발급, 정착지원금 지급, 주택알선 등 초기 정착 지원 업무 수행

(2)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 지역적응센터는 하나원 교육을 수료하고 최초로 거주지로 편입하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각자의 지원의사에 따라 지역적응교육을 실시하며, 교육시간은 초기집중교육(4주, 80시간)과 '지역적응지원' 을 통해 신속한 지역사회 적응과 자립 · 자활기반 조성을 지원함
○ 초기집중교육은 최초로 거주지 편입하는 북한이탈주민이며, 유아 · 학생 · 고령자 등은 제외함
– 초기집중교육 수료자에게는, 80시간을 직업훈련장려금 지급시간으로 인정하며 수료 기준은 64시간 이상 출석 조건임
– 지역적응지원은 거주지 편입(하나원 수료) 인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함

(3)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 정착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되었음

○ 북한이탈주민의 초기정착 및 생활안정, 자립, 자활, 교육 · 연구, 상호이해 확산 및 통합 등 정착지원 관련 업무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수행

〈그림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체계도



2.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정책 : 경기도를 중심으로

1) 광역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의 북한이탈주민관련 주요업무는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실태조사 취합 및 반기 보고와 임대주택 교환 또는 알선 등이며 경기도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1) 북한이탈주민 거주현황

○ 경기도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2011년 11월 현재 5,478명이며 화성, 안산, 부천, 수원, 평택 순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음

〈표 7〉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거주 현황 ('11.11 현재)

계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용인	안산	안양	남양주	의정부	평택
	414	308	224	461	434	470	66	101	249	404
5,478	시흥	화성	광명	파주	군포	광주	김포	이천	구리	양주
	122	489	313	193	273	22	271	56	5	33
안성	포천	오산	하남	의왕	여주	동두천	양평	과천	가평	연천
108	216	174	14	7	4	15	12	6	11	3

자료 : 경기도 내부자료(2012)

2)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 및 업무

○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의 경우 경기북부청사의 안전행정실 남북협력담당관 산하에 총22명의 직원이 북한이탈업무 및 남북협력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표 8〉과 같음

〈표 8 〉 경기도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구 분	주요업무
광역자치단체 (경기도)	○ 북한이탈주민 종합취업지원 안심시스템 개발, 북한이탈주민 취업박람회 추진,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센터 및 협의회 지원, 북한이탈주민 돌봄상담센터 운영 및 관리, 북한이탈주민 성공비전 캠프 행사운영 ○ 북한이탈주민 사무관리 양성교육,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상담, 북한이탈주민 쉼터 및 주거 밀집지역 관리 ○ 북한이탈주민 상담운영, 취업 및 직업훈련 알선 지원, 통일가족만들기 등 정착행사 지원 ○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관리, 북한이탈주민 각종 행사 지원

2) 기초자치단체

○ 경기도의 기초자치단체는 일반적으로 1명의 공무원이 타 업무를 수행하면서 북한이탈주민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실태조사, 생계급여 · 의료급여 현황파악 및 신청접수, 지역협의회 운영[10], 신규 주민등록 처리[11] 등의 업무를 수행함

○ 또한 거주지보호담당관이 있어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편입 및 각종 행정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표 9〉 경기도내 기초자치단체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구 분	주요업무
기초자치단체 (경기도 내)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 증명서 발급, 3s-net시스템을 통한 거주지 관리 및 실태조사 ○ 자원봉사센터 등과 연계한 생활용품 지급, 합동결혼식 · 문화탐방 등 위안행사, 창업지원 등을 수행 ○ 관계 법령에 의한 생계급여 및 의료봉사 시행, 주거알선 등의 업무 ○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정착지원 사업 사례 – 김장 및 고추장 담그기 사업으로 우리의 전통문화 전수(포천) – 북한이탈주민 특화프로그램(합동결혼식)(평택) – 여성북한이탈주민 정서지원 프로그램(고양) – 문화탐방 추진, 2세 출생 축하, 신규전입자 생필품 지급(부천) – 자원봉사센터, 후원기관 등과 연계 생활용품 및 전자제품 제공(안산) – 지역주민과의 화합을 위한 지역사회통합 프로그램(광명)

자료 : 경기도 내부자료(2012)

3. 문제점

1) 중앙정부의 문제점

○ 첫째, 일부 부처의 사업독점으로 인한 업무의 중복과 이로 인한 갈등 발생

10) 각 지역실정에 맞게 보호담당관, 사회복지사, 민간단체가 참여하여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협의함
11) 하나원 출소 후 첫 거주지역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함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은 국가위임사무로서 예산도 통일부 및 보건복지부의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북한이탈주민 업무는 이들이 한국에 입국하기 까지의 과정과 입국 후 하나원에서의 초기 교육 훈련업무 까지는 통일부에서 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하나원을 나온 후에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거주지인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실적으로도 하나원(통일부직속)을 통한 12주 교육이 종료되면 사실상 거주지인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업무로 위임(거주지보호담당관)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부는 지역적응센터의 운영 및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업무영역을 확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북한이탈주민의 실질 거주지인 지방자치단체의 북한이탈주민지원정책 업무의 중복현상이 나타나고 양 기관 간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음[12)]

○ 둘째, 안전행정부의 기능 미약

- 현재 안전행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사회통합지원과에서 일부업무, 이북5도위위원회에서 일부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주요 업무도 북한이탈주민 채용지침 작성,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실적관리 및 채용 독려, 채용 이후 성과평가와 문제점 정리 및 개선방안 제시 등과 통일학교 운영, 한마음축제 운영, 직업훈련생 교육훈련, 기업체연수 교육 등임
- 그러나 상대적으로 조직과 기능은 통일부와 고용노동부 등 타 중앙부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한 편임

○ 셋째,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의 미흡으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 발생과 북한이탈주민의 불편 초래

- 취업지원의 경우 통일부와 고용노동부가, 사회적응 교육 · 지원은 통일부와 안전행정부가 동시에 수행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중앙부처 간 업무의 중복으로 행정의 비효율성이 발생하며 이와 같은 결과는 서비스 수요자인 북한이탈주민에게 혼란과 불편을 초래함

12) 통일부 산하의 북한이탈주민 파견 상담사,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상담사, 사회복지사 간의 업무충돌과 사업효과 부진 등이 발생함

○ 넷째, 지역적응센터 및 고용지원센터의 접근성 부족임

– 지역적응센터를 전국단위로 설치 · 운영 중에 있으나 대도시를 제외하면 접근성 부족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거의 이용하기 어려움

2)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점

○ 첫째, 일부 자치단체의 관심 부족 및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 북한이탈주민이 지방자치단체에 정착한 후에는 거주지역인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가 필요하나[13]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볼 때,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국비 지원이 없고, 업무를 수행할 경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발생하여 애써 외면하거나 관심이 없으며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가 있음

○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부족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 미흡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내 사회복지관, 적십자사 등과 후원을 맺어 행사지원이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개별적 지원에 머물고 있음

– 특히 지방자치단체 북한이탈주민 업무담당자는 취업보호담당관(고용지원센터 직원)과는 정보교류 및 협력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경우가 있음

○ 셋째, 예산 부족

– 북한이탈주민업무가 국가사무이다 보니 지방비의 예산확보가 어려워 지방자치단체의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사업에 소극적임

– 또한 예산이 부족하다보니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관련 예산지출도 주로 북한이탈주민 지원 행사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음

– 현재 중앙부처 중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통일부의 지역적응센터 예산 외에는 거의 없는 상태이며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및 구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도 미흡함

13) 실질적으로 수도권 중심의 자치단체의 경우만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는 경우가 많고 전체 주민수의 극소수인 이들을 위해 담당부서를 조직하거나 전담인력을 배치한 것이 무리가 따르므로 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라 조직과 인력을 두는 것이 바람직함

○ 넷째, 지역특색에 맞는 정책추진의 곤란
– 북한이탈주민 보호 · 정착지원에 관한 사무는 국가위임사무로서 조례 제정 불가 등의 한계가 있어 지역특색에 맞는 정책추진이 곤란함
○ 다섯째, 타 기관과 업무 및 역할의 중복으로 북한이탈주민 채용의 어려움
– 북한이탈주민을 지역내 북한이탈주민 상담업무를 위해 자치단체에서 채용의 필요성을 인정하나 기존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및 지역적응센터의 상담사 역할과 업무가 중복되어 채용에 어려움이 있음

Ⅴ.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강화방안

1. 중앙정부

○ 첫째, 법 · 조례의 정비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사무로 규정하거나 지방사무로 이양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므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하거나 근거법을 신설하도록 함
– 한편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표준조례안 제정이 필요함[14)]
○ 둘째, 부처별 북한이탈주민정책의 분담 및 추진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는 부처 간 합의와 역할 분담이 먼저 이루어진 후 각 부처 특성에 맞게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로의 확산이 필요함
– 즉, 통일부는 정책수립 등 업무를 총괄하고 안행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착, 일자리 알선업무 등을 직접 관리하도록 함[15)]

14)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남, 인천, 대구, 대전, 광주, 부산 등 광역자치단체 및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한 바 있으나 국가 차원의 표준조례안 제정이 필요함

○ 셋째, 국무총리실의 컨트롤타워기능 강화
  –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은 국무총리실에서 통일부, 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 등 각 부처의 역할을 총괄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기능이 필요함
  – 북한이탈주민 정책은 일반적인 사무와 달리 남북관계 및 국제정세까지 고려하여 추진해야 하므로 안전행정부나 통일부 등 어느 한 부처에서 전담할 수 없으므로 국무총리실 같은 컨트롤 타워에서 중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기획하고 부처 간 조정이 필요함
○ 넷째, 북한이탈주민 관련사무의 지방 이양
  – 북한이탈주민 보호 · 정착지원에 관한 사무는 국가위임사무로서 조례 제정이 불가능하므로 지역특색에 맞는 정책시행이 곤란함
  – 따라서 정착지원업무에 대하여는 지역특색에 맞는 각종 시책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지방사무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섯째, 안전행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 및 기능 강화
  – 향후 북한이탈주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정착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북한이탈주민 지원기능이 강화될 수 밖에 없음
  – 따라서 안전행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강화를 위해 현재의 조직과 기능을 강화하고 외부 전문가 등 자문위원단을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체계 구성 및 지원정책을 추진하도록 함
  –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정책의 장기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지역에서의 사회통합정책으로서 지역주민과의 화합정책, 북한이탈주민 취업정책, 지역정착 후 지역실정과 관련한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 매뉴얼 작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장단기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여섯째,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지원기능 강화
  – 이를 위해서 ① 북한이탈주민이 집중거주 하는 지역에 전담인력 배치 및 예산지원을 강화함. 즉, 북한이탈주민이 집중 거주하는 지역에는 실질적인 정착사업 발굴, 지역협의회

15) 예를 들어 다문화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처 간 다문화지원사업 중복 수혜에 따른 대상자들의 혼란 가중과 이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과 예산의 낭비가 발생하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 지원 업무도 이와 같은 다문화사업과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운영 내실화 등을 위해 전담인력 배치와 사업비의 지원이 필요함 ② 북한이탈주민의 지역 전입 후 사회적응훈련을 위한 예산지원임. 하나원 퇴소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신규 전입자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사회시스템 이해와 사회적응 훈련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비지원이 필요함

③ 북한이탈주민 계약직공무원 채용 시 총액인건비의 반영임. 북한이탈주민의 공무원 채용 시, 일반 채용자와 비교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독자적으로 총액인건비를 확보할 수 없으므로 국비의 지원이 필요함

○ 일곱째, 북한이탈주민 행정지원인력 채용 시 적합 직종의 발굴

– 즉, 행정지원 인력으로 채용 시 적합한 업무와 채용수요가 있는 희망부서를 찾기 어려우므로 북한이탈주민에게 적합한 직종과 직무를 발굴할 필요가 있음

2. 지방자치단체

○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야 할 주요사업은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과의 교류사업, 사회적응교육, 인식개선, 취업지원 사업 등이며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지역공동체사업 및 교류사업 추진을 통한 주민화합

– 남한주민의 경우, 북한이탈주민이 밀집 거주하는 임대주택지역은 전입을 원치 않거나 이들에 대한 특별지원에 대해 역차별로 여기는 등 다소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음

– 또한 북한이탈주민을 생소하고 낯선 존재로 인식하여 이웃주민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거나 관심이 없으며, 북한이탈주민 역시 남한주민에 대한 피해의식 등 거부감을 가지고 있음

– 따라서 이와 같은 부정적 인식을 제거하고 상호 화합을 위해 지역주민과 함께 텃밭운영 등 지역공동체 사업 운영, 지역주민의 북한이탈주민 멘토활동 사업, 북한이탈주민으로 구성된 봉사단체 운영, 지역축제에 북한음식 소개 등의 교류사업의 추진과 캠페인 등의 사업을 통해 서로 간의 불신을 없애고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소속감을 제고시키도록 함

○ 둘째,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교육 지속적인 지원

–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 퇴소 후 바로 지역전입이 이루어지는 경우, 남한사회시스템에 대한 이해 부족과 취업 애로, 탈북과정에서 겪은 불안심리 등이 지속되어 일상생활과 직장적응에 곤란을 겪고 있음

– 따라서 지역에서 사회적응교육의 지속[16], 탈북과정에서 겪은 신체적 · 정신적 장애에 대한 건강 지원, 심리치료 등 의료제도 확대와 심리교육 프로그램의 병행 운영이 필요함[17]

○ 셋째, 맞춤형 직업훈련교육 실시

–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고용지원센터의 취업보호담당관과 정보교류나 연계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 북한이탈주민이 일반인과 동일한 직업훈련과정 참여 시, 수업이해 곤란 등으로 중도 탈락자가 많이 발생함

–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일자리 창출에 앞서 취업률이 저조한 원인과 애로사항을 분석하여 북한이탈주민에게 맞춤형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이들에게 북한이탈주민 취업 성공사례 등을 적극 홍보함

○ 넷째, 북한이탈주민 출신 공무원의 직장내 참여 유도

–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신분노출을 꺼리는 경향이 있어 지역간담회 및 결연식 참여가 매우 저조하고, 남한사회에 동화노력이 부족한 편임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채용된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어울림 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역할을 부여하고, 공무원들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1:1 멘토활동을 하면서 이탈주민 지원정책 모니터링 등의 업무활동을 하도록 유도함

○ 다섯째,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의 교육훈련 실시

– 북한이탈주민이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남 · 북한의 조직문화 차이, 직장내 북한이탈주민과의 갈등사례, 갈등관리 해결을 위한 사전이해 교육을 실시함

16) 사회적응교육은 취업에 앞서 조직적응력 제고, 북한식 직장개념 탈피 등 의식변화와 자본주의시스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교육을 의미함

17) 북한이탈주민 근로자에게는 외상 후 정신적 스트레스 치유와 직장 적응을 도울 수 있는 심리교육 프로그램 실행이 필요함

○ 여섯째,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민관협의체 구성

–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민관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며, 본 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북한이탈주민 지원위원회를 두어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발굴, 북한이탈주민 교육 및 재정지원 등 주요사항을 심의 · 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참고문헌

강일규 외. (2005.), 「북한이탈주민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연구」. 서울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구견서. (2003). 다문화주의의 이론과 체계. 「현상과 인식」. (90) : 29-52.

김경호. (2005). 새터민의 사회정착 지원책에 관한 고찰 : 「국제정치환경과 한반도」. (32) : 45-50.

김성철 외. (1999). 「북한이해의 길잡이 : 전환기의 북한사회」. 서울: 박영사.

김연철. (2002). 북한 신경제전략의 성공조건. 「국가전략」. 8(4) : 6-7

김연철 · 박순성 편. (2002). 「북한경제개혁연구」. 서울 : 후마니타스.

김화순. (2011). 탈북이주민 지역사회 통합모델을 위한 시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워크셥 발표논문. 2011. 10.

김혜순. (2008).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이 다문화사회 실험 : 최근 다문화담론의 사회학. 「한국사회학」, 42(2) : 36-71 김희정. (2007). 한국의 관주도형 다문화주의 : 다문화주의 이론과 한국적 적용. 서울 : 한울아카데미.

대한변협. (2009)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 개정을 위한 세미나. 12. 11.

마르코 마르티니엘로, 윤진 역. (2002). 「현대사회와 다문화 주의」. 서울 : 한울

박영자. (2008). 다문화시대 새터민의 이주민과의 노동생활 비교인식 : 사회통함정책의 이념과 방향수립을 위하여. 「정책연구」.(겨울호). 서울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_____ . (2011). 한반도 통일 · 통합을 관통하는 사회통합가치와 정책방향. 이화여대 통일연구원 가을 학술대회논문. 57-60.

박윤숙 외 공저. (2008). 「이주민정책과 서비스」. 서울: 나눔의 집.

박은숙. (2008). 북한이탈주민의 실태와 남한사회 정착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하계학술대회. 한국행정학회.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지원정책 강화방안

서윤환. (2004).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의 효율성 제고방안. 「대한정치학회보」. 12(2). .265-286.

안혜영. (2000).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적응과 사회복지적 대응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윤여상. (2001). 「국내 북한이탈주미의 사회적응 프로그램」. 박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대학원.

윤인진. (2005). 남북한 사회통합의 조건과 전망. 「정책과학연구」. 서울:단국대학교.

이금순 외. (2003).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연구」. 통일연구원.

이금순. (2006). 여성이주자의 사회적응과정 연구 : 북한이탈주민을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45(1).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이기영. (200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지역협의회의 운영체계의 방향성. 「통일문제연구」. (24) : 412-64.

이금순 · 안혜영. (2007).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 분석. 「통일정책연구」. 16(2) : 145-171.

이시형. (2008).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OUGHTOPIA(The Journal of Social Paradigm Studies. 23(1) : 187-222.

이주철. (2002). 북한주민의 정권인식과 체제선전에 대한 반응. 「통일문제연구」(37). 262-264.

정광호 · 김민영 · 금현섭. (2010). 탈북자지원정책의 새로운 이해 : 문제정의의 관점에서. 「한국정책학회보」. 19(1) : 71-101.

정주신. (2003). 국내의 탈북자 실태와 정부의 과제-경제적 측면을 중심으로-. 한국통일전략학회. 「통일전략」. 3(2) : 97-120

조석주. (2008). 「지방자치단체의 결혼이민자 지원정책 강화방안」. 서울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최현미. (2008). 결혼이민자들의 사회참여활성화를 위한 과제 : 바람직한 다문화가정 정책 모색을 위한 워크셥. 행정안전부. 101-119.

경기도. (2008). 「새터민 정착지원 방안 연구」. 수원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통일부. (2008). 2008 통일백서.

행정안전부. (2011). 행정안전부 내부자료.

Ansell, C. and A. Gash. (2007). Collaborative Governance in Theory and Practice. JPART. 13:1-29.

Baker, R. L. (1995). the Encydopodin of social work, washington D. C: NASW PRESS, p. 134.

Castles, S. and M. J. Miller. (2003). The Age of Migration: International Population Movement in the Modern World, 3 Edition New York: Guilford . pp. 236-238.

Taylor, C. (1994). "The Politics of Recognition", in Amy Gutmann, ed., Multiculturalism: Examining the Politics of Recogni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utnam, R. (1993).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al in Morden Italy, N. J.: Princeton University Press.

Shergold, P. (2008). Getting through Collaboration. in J. O' Flynn and J. Wanna. (eds.). Collaborative Governance A New Era of Public Policy in Australia?: pp.13-22.

Wanna, J. (2008). Collaborative Government: Meanings, Dimensions, Drivers and Outcomes. in J. O' Flynn and J. Wanna. (eds.). Collaborative Governance A New Era of Public Policy in Australia? pp. 3-12.

최근 간행물

2012

통권 458 지방자치단체 조직운영시스템의 다양화 방안
통권 459 지방자치단체 외부인재풀의 구성과 활용 방안
통권 460 다문화사회 정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이주민정책 개선방안
통권 461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제도의 다양화 방안
통권 462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자본 측정 및 증진방안
통권 463 중앙-지방간 사회복지 재정부담 조정방안
통권 464 지방투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방투융자심사제도 발전방안
통권 465 고령화 · 저성장시대의 지역발전 투자전략
통권 466 지역쇠퇴분석 및 재생방안
통권 467 지역공동체 주도의 발전전략 연구
연구총서 (통권 468) 새로운 지방예산제도

2011

통권 451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적 거버넌스 재설계 방안
통권 452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공급 다원화 전략
통권 453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역량 강화 전략
통권 454 지방자치 선진화를 위한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
통권 455 창조적 지역발전 전략
통권 456 지역주도의 일자리 창출전략
연구총서 (통권 457) 지방세제의 선진화 - 자율성과 책임성 제고

2010

통권 444	2020년 지방자치제도 발전모형
통권 445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전달체계 개선방안
통권 446	성과창출형 지방정부 시스템 구축
통권 447	2020 지방재정 그랜드 디자인
통권 448	환경변화에 대응한 지방세제 개편
통권 449	미래환경변화에 대응한 지역발전전략 연구
연구총서 (통권 450)	녹색성장과 지역특화발전